개성공단 중단 입주기업 '날벼락'

정부조치 '폐쇄'에 방점
北, 시설물 몰수 가능성 커

정부가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선언하면서 남북 교류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이번 조치가 영구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이 '제2의 금강산'이 되는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목소리도 나온다.

2008년 7월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재개는 고사하고 재산까지 몰수된 금강산관광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면서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으로 기업 생사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내몰렸다.

앞서 지난 10일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면담 후 "정부의 (중단 결정)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정부가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할 말미도 주지 않고 군사작전하듯이 전면 중단 결정을 하고 일방 통보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절벽에 떨어져 죽으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2013년에는 북한이 먼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공단 재개가 쉬운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전면 중단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출구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설명이다.

개성공단은 12년 간 중단과 재가동을 몇 차례 반복했지만 북한의 핵실험 포기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폐쇄'를 전제로 한 중단에 방점이 찍힌다.

핵과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공단정상화를 재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퇴로를 우리 정부 스스로 막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한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압박용으로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꺼냈다.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보다 우리 측 입주 기업의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 압박 제재가 오히려 우리 측의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최악의 사태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빌미로 북측이 공장 설비 등 시설물을 모두 몰수하는 경우다.

그러나 북한에 있다 해도 우리 측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남북이 2002년 경제협력을 위해 채택한 4대 합의서에는 상대방 투자 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북측이 시설물을 몰수한다 해도 정부가 나서서 제재할 뚜렷할 방안은 없다는 게 현실이다.

/이성주기자

"전주항공대대 헬기소음 재측정해야"

환경단체, 이착륙 주변 최고 92.0dB 주민불편 주장

전주항공대대 부지 이전을 앞두고 헬기소음 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녹색연합과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는 11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 송천동 206항공대대의 헬기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92.0dB(데시벨)을 기록하는 등 헬기운영으로 인한 소음이 주민생활 불편과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항공대대 헬기소음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한 만큼, 도도동 이전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와 환경갈등조종협의회 구성 등 지역주민들과 갈등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녹색연합과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는 지난달 27일 전주시 송천동 206항공대대 주변 3개 지점에서 헬기소음을 측정했다. 소음측정 지점은 헬기 활주로의 중간지점으로부터 각각 1.5km(이륙), 1.55km(착륙), 3.1km(장주비행) 떨어진 지점으로 헬기가 이륙/착륙/장주비행하는 항로주변에 위치한 지역이다.

전주항공대대 소음도 측정 결과, 특히 이·착륙항로에서 헬기 소음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헬기가 이륙하는 항로에서 KUH 기종의 경우 소음도가 80.4~82.9dB을 기록하였으며, 500MD기종의 경우 74.4~78.8dB을 기록해 이륙평균 소음도는 80.0dB을 나타냈다.

또, 헬기가 착륙하는 항로에서는 KUH 기종의 경우 소음도가 83.0~92.0dB, 500MD기종의 경우 79.6~80.3dB로 착륙평균 소음도는 85.8dB을 기록했다.

장주비행항로에서 3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한 소음도조사에서도 KUH의 경우 76.5dB, 500MD의 경우 64.5dB을 기록, 주변 생활소음과 교통소음보다 높은 소음도를 나타냈다.

전북녹색연합 관계자는 "항공대대가 이전하는 도도동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도 정밀한 환경영향평가와 지역민들과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항공대대 이전 부지로 확정된 도도동 일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헬기 운항 시 소음도는 주거시설과 축사시설 모두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요구를 일축했다.

/김영재 기자

덕진구, 26일까지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덕진구(구청장 정태현) 건축과(과장 임채준)는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축과는 1단계로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시설 155곳에 대해 2월중 해당 놀이시설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시행,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조치토록 했다.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와 합동으로 3월중 60개소를 선정해 중점 점검에 들어간다.

중점 점검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미이행, 안전교육 미이수, 보험 미가입 시설 ▲관리주체 자체점검(1차) 미실시 또는 미회신 시설 ▲과거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된다.

/김영재 기자

약자의 호소 들어주세요 익산시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행복나누미의 한국노총 소속 직원들이 11일 익산시청 앞에서 K 익산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제출받은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스포츠센터 화재 긴급대피 인명피해 없어

군산시 나운동에 위치한 시티 스포츠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1일 오전 7시 8분께 이 건물(7층) 5층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섰다.

이 불로 수영장에 있던 회원 15명과 관리실 직원 3명 등 18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노영 기자

설 연휴 전주시 문화시설 7만7000명 방문

설 연휴를 맞아 경기전과 동물원 등 전주시 대표 관광지와 각종 문화시설에는 귀성객과 시민 등 가족단위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전주시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의 설 연휴 기간 각종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 경기전과 소리문화관 등 14개 문화시설에 총 7만6999명의 방문객이 찾았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전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경기전에는 무료개방일인 설날 당일(8일) 가장 많은 9136명이 다녀간데 이어 유료입장일인 지난 9일과 10일에도 각각 5360명, 4701명이 방문, 지난 설 연휴기간 총 2만2409명(1일 평균 4482명)이 경기전을 찾았다.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방문객인 3270명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1200여명 증가한 것으로, 총 2825만여 원의 입장료 수입을 기록했다.

또한 경기전 내 어진박물관에는 5일간 2만274명이 다녀갔으며, 설날 당일 휴관한 소리문화관에는 4일 동안 1만2891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주요 문화시설에는 연휴 내내 명절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전주동물원에도 긴 연휴를 맞아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지난 10일에만 6291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5일간의 이번 설 연휴기간 총 1만5012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재 기자

"국민 기본권 보장에 최선"

장석조 전주지법원장 취임

장석조(55·사진) 제49대 전주지방법원장은 11일 전주지법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재판 절차에서 국민이 주체로 존중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신임 법원장은 "헌법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소송 절차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법원장은 또 "서면 중심으로 이뤄지는 재판 절차에서 소송 당사자인 국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보고, 공개 법정을 중심으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노력해나가자"고 역설했다.

이어"헌법의 가치와 인간의 기본권을 지켜 국민과 소통하고, 재판에 충실한 법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출신으로 휘문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장 법원장은 지난 1983년 사법고시(사법연수원 15기)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헌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재판과 헌법적 판단, 재판받을 권리의 헌법상 보장 등 다수의 논문을 통해 국내 법체계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2008년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박용주 기자